

학계와의 협력방안 논의

진회 김준철 회장은 김육동 이화전기 사장(진흥회 부회장)과 함께 지난 9월 29일 본회를 방문한 이은웅 충남대학교 교수(2004 대한전기학회 회장 내정자)를 접견하고, 향후 학계에서 연구된 핵심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시켜 다각적인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학간의 긴밀한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SIEF & Korea Power 2004」 실무업무협의

진회 공창덕 상근 부회장은 지난 9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미국 PennWell사측 Nick Ornstien사장 및 관계자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SIEF & Korea Power 2004」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위해 열린 실무자 업무협의를 마친후 상호업무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창덕 상근부회장은 “우리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도 이제 세계굴지의 전시그룹인 PennWell과의 공동개최로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한 뒤 PennWell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lectric Indonesia 2003」, 「Power-Gen Asia 2003」, 「2003 IEEE/PES」참가

진회는 지난 10. 1 ~ 4(4일간) 인도네시아 (쟈카르타)의 「Electric Indonesia 2003」, 9. 23 ~ 25(3일간) 베트남(호치민)의 「Power-Gen Asia 2003」 및 9. 8 ~ 10(3일간) 미국(달라스)에서 개최된 「2003 IEEE/PES」등 해외유명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내 전력기자재의 우수성 홍보, 선진기술 습득, 진출가능 품목발굴, 판로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및 2003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PLN이 지난 1961년 설립이래 전원개발부터 발전, 송·배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기산업의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새로운 전기산업의 형태로서 민간자본에

의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독립계 발전사업자(IPP)를 운영하여 2020년까지는 753만KW의 IPP계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 동 전시회의 참가를 통한 우리 중전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 등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둘째, 베트남은 지난 1986년 도이마이정책 추진 아래 경제개발이 가속화되어 오면서 전력공급에서 팔목할 만한 성장(90년 2,500MW, 2002년 8,227MW)을 하였으나 전력수요도 급격히 증가해 아직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전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해 37개 발전소를 추가 건설키로 함에 따라 이를 위해 EVN은 2010년까지 190억달러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전력공급을 1만 6400MW까지 확대하는 등 북부지역과의 평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부터 AFTA협정에 따른 수입관세율 인하조치로 인해 0~5%까지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어 국내 중전기기 업계의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금번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향후 새로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미국은 기존의 동남아 및 중동 지역 위주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과감히 탈피하여, 약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해 중전기기 제품의 선진국가인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산업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최근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뉴욕정전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 차원에서의 전력산업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전시회 참가로 인해 각종 첨단제품 전시 및 Conference를 통한 기술정보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장으로 뿐만 아니라 선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중전제품의 판로개척, 수출 활성화 및 무역수지 개선 등의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발전제약비용 관련 한전과의 간담회 개최

진흥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발전제약비용과 관련하여 한전 이형한 부처장, (주)효성, 현대중공업(주), LG산전(주)등 1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준철 회장은 업계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내년 제약비용시행은 시기상조이며, 법적인 제도정비 후 시행검토 또는 철회해 줄 것을 한전에 건의하였으며 한전측에서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협력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최적의 대안을 도출키로 하였다.